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야합을 막으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정부·여당이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한(5월 6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재보선 성적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재보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막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지난 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지 말고 실무기구를 나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고는 현실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최후통첩은 기여율 9.5퍼센트, 지급율 1.7퍼센트다. 35.7퍼센트 더 내고 10.5퍼센트 더 받는 것이다. 27.3퍼센트 더 내고, 9.5퍼센트 더 받도록 한 2009년 개악보다도 삭감 폭이 더 크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다.

얼마 전까지 공무원노조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갔다는 안이한 전망이 확산되더니, 새정치연합이 재보선에서 패배하자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는 그른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새정치연합에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해 온 탓에 생겨난 지그재그 현상이다.



실무기구가 아니라 우리의 힘에 의지하자 4월 25일 '공적 연금 강화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이미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는 ‘개악’을 전제로 숫자 싸움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는데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실무기구에 남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강기정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퍼센트 진행됐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결정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공노총과 교총 지도자들이 4월 20일 실무기구에서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조성됐다. 이충재 집행부는 직접 양보안을 내

놓지는 않았지만 공개적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실무기구에 남아 공노총과 교총 양보안에 연대 보증을 서 줬다.

최근 공무원노조 서울, 강원, 법원본부가 이충재 집행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며 ‘양보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들은 “조합원들은 … 어떠한 양보안도 승인해 준 적이 없다”(강원본부), “공무원연금 개악은 명백한 ‘연금민영화’의 시발점[이므로] 어떠한 개악도 용납할 수 없다”(법원본부)며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 사수”(서울본부)가 투쟁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본부는 “숫자놀음이나 하라고 실무기구에 참여하라고 한 적이 없”고 “실무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이충재 집행부에게 실무기구 탈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현장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촉구대로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여야 야합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5월 1~2일 국회 특위에서 여야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설령 5월 2일 여야 단일 개악안이 나오더라도 끝난 것은 아니다. 5월 6일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는 5월 6일까지 이충재 집행부에게 파업 돌입 등 총력 투쟁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런 투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보선 이후 한층 강경하게 양보를 강요하며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배수진을 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좌절시켜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장호중

새정치연합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테니 공적 연금을 일부 개선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직접 양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보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물론 소득대체를 인상과 사각지대 축소 같은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은 꼭 필요한 조처들이다. 이는 정부의 책임과 기업주들의 부담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만 늘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삭감안을 수용하고 그 돈으로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비현실적이다. 정부·여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반년 가까이 공적 연금 강화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거듭 밝혀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재정 절감’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한 마당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정말로 강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공적 연금 강화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 “야당 일각에서 이렇게 절감되는 돈의 몇 퍼센트 내지는 몇 조 원을 공적 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혁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사적 연금 시장을 활성화할 조처를 준비하고, 국민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공적 연금을 약화시킬 준비를 해 왔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그 디딤돌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공적 연금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양 흘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적 연금 강화’는 전혀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 지도자들에게 아래로부터의 반발을 달래고 타협할 명분을 주는 꼼수였을 뿐이다.

꼼수

이런 맥락에서 ‘공적 연금 강화’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양보 압박을 가하는 구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적 연금 강화를 연내 합의하자고 한다. 현찰을 받고 여음을 내주겠다는 식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조원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인상’이라는 표현도 ‘조

정’으로 고치자며 벌써 ‘먹튀’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새정치연합도 공적 연금 강화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한 주범이고,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에 합의해 준 공범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공무원노조 등을 대타협기구에 끌어들이고는 결국 정부·여당과 별 차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내놓았다. 새누리에 비해 이중대이지만 새정치연합도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정당으로서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확인한다.

지금 국회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은 2008년 유시민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한 당사자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좌절됐지만 개악의 수준과 명분은 지금 새누리당 안과 대동소이했다.

이런 새정치연합이 공적 연금 강화

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말로 싸우리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기업인들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저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만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진정한 동력, 즉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 되면 전체 공적 연금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악만으로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적 연금 강화는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 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파업 파괴자, 집단폭행 사주자

이경훈 지부장은 노동계 지도자의 일원 자격 없다

〈노동자 연대〉 편집팀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백주대 낮에 집회 연단에서 민주노총을산투쟁 본부 총파업승리 지역실천단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은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하며 “이경훈 지부장님, 노조 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연설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연단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경훈 지

부장은 위협적으로 무대 앞까지 뛰어나왔고, 상집 간부 열댓 명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허 단장의 마이크를 뺏고는 그를 밀치며 목을 가격했다. 결국 허 단장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도 이경훈 지부장은 4월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건은 “현대차지부 비하 발언 속에서 발생된 사태”이며,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자체가 부당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사고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다시금 비난한 것이다.



집단 폭행으로 쓰러진 허수영 지역실천단장.



비판을 물리력으로 억압하는 권위주의자

이경훈 지부장은 ‘지역실천단장의 발언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사태의 책임을 떠넘겼다. 비판자는 맞아도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주장일지라도 말로 한 주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다.

그런데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의 발언은 잘못된 주장이기는커녕, 이경훈 지부장의 파업 파괴 행위에 대한 필요

한 비판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이경훈 지부장이 “억지 파업”이라며 4·24 총파업의 정당성을 깎아내린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허 단장이 ‘이경훈 지부장은 지부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 때 집회 참가자들은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사실 이경훈 지부장은 전에 그 자신이 사회단체 활동가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점거파업 당시, 연대한 활동가를 감금

폭행한 뒤 농성장에서 내쫓았다.

당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단 돌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 놓고 쌍욕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목을 누르고 뺨을 때리고 목이 제압된 상태에서 10여 분을 계속 맞았다. 한참 때리고 나서 ‘무릎 꿇어라 눈 깔아라. 니가 공장 생활 한 번이라도 해 봤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외부 세력이, 공장 생활도 안 해 본 놈들이 지회 조합원들을 부추기느냐? 배후세력 때문에 지회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 못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경훈 지부장은 이런 무지막지한 폭행을 저지르고도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몇 년 뒤 버젓이 지부장에 다시 당선됐고, 또 이번에 지역실천단장을 백주대낮에, 수천 노동자가 보는 앞에서, 노동운동의 공식 연단 위에서 부하들이 폭행하도록 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 운동은 결코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 폭행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경훈 지부장은 공개 사과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금속노조는 폭행 교사자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당사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악질적인 성격의 파업 파괴 행위를 물타기하기

이경훈 집행부는 이번에 파업에 나서지 못한 노조들이 많다며 자신을 정당화했다. 물론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노조들이 적지 않다. 그런 조직들이 이경훈 집행부처럼 노골적이고 뻔뻔스런 파업 파괴 행위를 한 건 아니다. 그래도 상당수가 총회, 간부 파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켜 투쟁 수준을 높여 나아가길 속제가 있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는 기층 조합원들이 싸울 의지를 보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파업 거부 방침을 취했다.

현대차지부처럼 투쟁 전통이 있고 잘 조직된 노조는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지지해 오히려 앞장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말하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청년 사이를 이간질하는 상황에서, 현대차지부가 파업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경훈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부당하게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청년들한테 욕을 먹는 것이다.

그 같은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박근혜는 정몽구와 같은 재벌들의 노동 착취를 도우려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훈 지부장은 사용자들의 언론인 〈매일경제〉와 인터뷰까지 해 가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보타지(파괴) 행위자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4·24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엄벌”을 위협하고 사용자들의 언론이 파업의 정당성을 물어뜯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는 조직의 ‘지도자’가 거의 구사대 비슷한 짓거리를 한 것이다.

총파업 행동 통일을 거부한 무규율한 자

이경훈 지부장은 4·24 총파업이 “억지”였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27만 명이 “억지”를 썼다는 얘기다. 노사정위 결렬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늦춰졌으므로 파업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민주노총·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결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노동자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5~6월 중 임금체제 개악과 해고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월부터 본격화하는 입단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고용에도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개악과 삭감이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된 뒤에야 비로소 항의성 파업을 벌이는 것은 효과가 없거나 기껏해야 반감된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투쟁에 시동을 걸며 선제 파업 조직에 나선 덕분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협상 결렬선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운동과 성완종 게이트 같은 정부의 위기에도 이력저력 대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경훈 집행부의 4·24 총파업 비난이야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경훈 지부장의 발언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전제인 행동 통일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규율 위반이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그 전에

파업에 찬성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그 결정을 따른다’는 민주집중주의가 노동운동의 오랜 전통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런 전통을 깨고,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단체행동에 동참하길 거부하며 “억지”라고 비난했다. ‘파업 파괴자(scab)’라는 말은 이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집중주의

그는 ‘울산에선 전 조합원 대비 파업 지지율이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지만,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지역별로 파업 가결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치더라도 현대차지부 조합원의 과반이 파업을 지지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런 점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수치만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현대차지

부 같은 대규모 산하조직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가며 제 멋대로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늘어날 것이고, 노동조합 조직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단체행동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노조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대립시키며, “불법파업” 시 조합원 개인이 파업에 불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개인의 권리”를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가 내부에서 강화되면 집단성만이 존재의 기반인 노동운동은 아예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배반에 대한 비판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동권, 운동의 대의를 옹호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얼토당토않게 자신과 현대차지부를 동일시하기

이경훈 지부장은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이 “현대차지부를 비하·비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 단장이 비판한 것은 현대차지부 자체가 그 조합원들이 아니다. 그는 이경훈 지부장을 정확히 꼬집어 비판했다. 이 비판은 집회에 참가한 현대차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거부는 현장조합원들의 의사가 아

니었다. 현대차 조합원의 90퍼센트가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에 참가했고, 과반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확대운영 위에서도 대의원대표, 위원회 의장 다수가 총파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선 대의원회·현장조직위원회 등이 4·24 총파업 동참 촉구 대자보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파업 거부 입장을 밝힌 뒤에도 현대차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조합원 3백여 명이 4월 24일에도 현대차지부 사무실 앞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따라서 허 단장의 이경훈 집행부 비판은 현대차 조합원들에 대한 모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파업을 철화하고 집단 폭행까지 저지른 이경훈 지부장이야말로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모욕(깎보고 욕되게)한 것이다.

노조/지부 집행부가 저지른 잘못이나 배신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이런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소

환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노조/지부 집행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노조/지부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금속연맹은 2004년 비정규직 투쟁을 배신한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뿐 아니라, 아예 노조 전체를 민주노총에서 제명한 일이 있다. 이는 완전히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노조 전체를 민주노총에서 찍어냄으로써,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교체하고 노조를 쇄신할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



4월 30일 울산지역 9개 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

커지는 규탄 목소리

이 같은 집단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울산에선 지역실천단에 함께한 지역 단체 9곳(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울산추진위,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해방실천연대 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해고자협의회, 정의당 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이 “폭력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경훈 지부장의 공개 사과와 사퇴, 민주노총·금속노조의 폭행 가담자 징계 등을 촉구했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등 좌파 노동단체들도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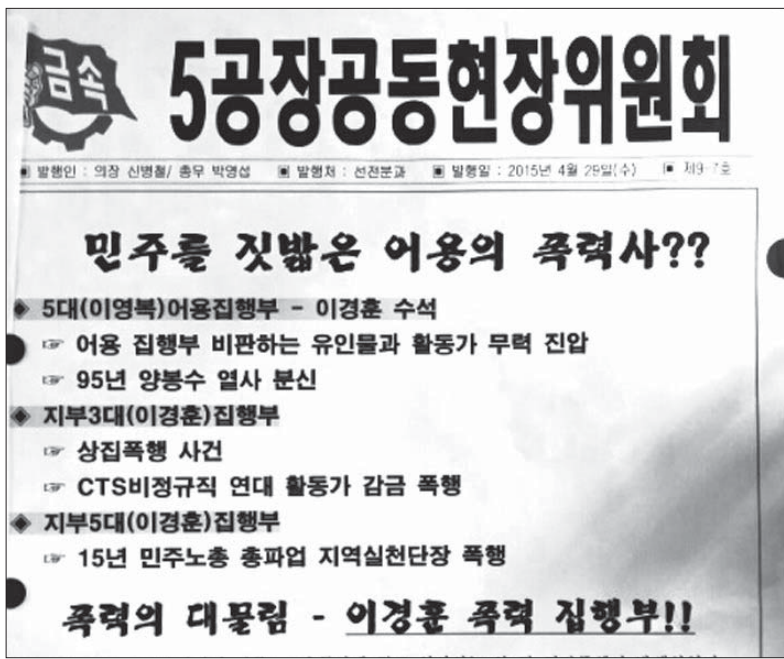
이 같은 비판은 현대차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금속민투위, 들불, 금속연대, 민주현장 등 주요 조직들이 규탄 대자보를 부착

했고, 3공장과 5공장 등 공장별 사업부위원회·현장조직위원회들이 이경훈 지부장의 폭행 전력을 폭로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쌍용차, 현대중공업 등 금속노조 조합원 1천1백여 명은 “이경훈 지부장은 사퇴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교

조·공무원노조 조합원 연서명과 전국 12개 비정규직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노조들의 공동 성명, 건설노조 조합원 연서명 등이 조직되고 있다.

이런 항의는 더 커져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이경훈의 화려한 폭행 전력 현대차 공장에 부착된 대자보.

단결을 비판 억압용 구호로 전락시키기

이경훈 지부장은 4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탄압 저지” 투쟁을 언급하며 “지금은 단결할 때”라고 말했다. 전체 파업 전선의 일각을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그걸 공개 비난하고, 심지어 지역실천단장을 폭행한 그가 반성은커녕 “단결”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물리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결”을 말하는 바로 그 성명에서조차 4·24 총파업 거부가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이경훈 집행부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바로 몇 달 전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려 보자. 당시 금속노조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게 굴복해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해 주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더는 갈등을 지속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호

소했다. 금속노조의 많은 지도자들은 ‘미워도 현대차지부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런 배신을 보아넘겼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힘을 합쳐 싸우기는커녕 4·24 총파업 전선을 크게 교란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한 현대차 사측에 맞서서도 당장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협상장에 남아 거래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연히 많은 현장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경훈 지부장은 당장 5~6월로 예고된 정부의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해서도 “상위법을 넘을 수 없기에 [투쟁의] 시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지침 공식 발표 시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의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경훈 지부장의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투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투쟁의 동력은 이경훈 지부장 같은 썩어빠진 관료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한테서 나온다. 지금 현대차 조합원들은 총파업의 일각을 파괴하고, 사측과의 거래에 매달리며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 저지 투쟁을 회피하려 하고, 연대단체 활동가에 대한 폭행을 교사하기까지만 이경훈 지부장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모아 이경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독립적으로 투쟁을 할 준비를 해 나아가야만 향후 노동운동도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도부들은 4월 24일 울산 집회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만행을 저질렀을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일치단결해 이경훈 집행부에 항의하고 집회장 바깥으로 몰아낸 일의 정치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일부임을 부정한 것이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합원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방해 등 박근혜 정부의 여러 악행에 반감을 가져 온 사람들은 4·29 재·보선 결과에 입맛이 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오만한 박근혜가 재·보선에서 참패해 굴욕을 당하길 바랐다.

4·29 재·보선은 박근혜가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정권 핵심부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휩싸여, 취임 두 달밖에 안된 총리가 물러났다. 책임을 회피하고 소나기를 피해 시간을 벌어 보려는 심산으로 박근혜는 ‘도피성’ 해외 순방을 나갔다.

그 사이에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이 있었고,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강행 시도에 맞서 수만 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충돌을 불사하며 싸웠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다시 3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에게 이완구 사퇴를 압박하는 등 레임덕 증세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애초에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3대 1로 이길 것이라던 4·29 재·보선이 박빙이라는 관찰을 듣게 됐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 7·30 재·보선 때와도 비슷하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총체적 무책임과 무능을 보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고,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이 15곳에서 11곳을 이겼다. 새누리당과 별 차별성을 못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반(反)우파 정서의 진보·개혁 염원 대중이 ‘징벌적 투표’를 한 결과였다. 진보세력은 이를 대체할 실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슷했다. 문재인은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경제정당 만든다면서 더 친기업적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을 거드는 구실을 했다.

또한 정부 시행령(안) 입법 예고로 다시 촉발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선물까지 줬다.

우파에게 힘을 실어 준 꼴이다. 그러니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 집권 우파의 대안으로 보일 리 없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해 총 12명을 선출한 이번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겨우 기초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모호한 진보정치 세력도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국민모임의 정동영이 ‘대표 야

당 교체’를 호소했다. 노동당과 노동·정치·연대의 리더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기존 새정치연합의 이탈 조직에 의존한 정동영의 선거 운동은 진보색을 뚜렷이 각인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4·29 재·보선이 대중의 보수화나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나 주류 정당들 간의 양당 구도에 의해 대중의 진짜 정서가 왜곡돼 반영되기 일쑤인 선거법이나 선거구, 승자독식 방식 등의 제약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는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이 진정한 ‘민’의를 표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여당의 승리는 주로 야권 후보 분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얻은 어부지리라고 할 수 있다.

돌파구

물론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서 보기 좋게 패했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 등은 자신들의 운동이 더 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기가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로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부르는 요인들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 갈등이 야기한 안보 문제 또한 지배계급 안에서 지속적 인 분열 요인이다.

경제 위기는 여전하다. 더 나빠질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벌일 고통 전가 공세는 조직 노동운동의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강행 시도에 맞선 항의도 여전히 부담이다.

그 기반상 - 또 인물과 관행으로 도 -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실사 선거에서 패배했다 해도 박근혜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4월 28일 담화문에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 시장 지향적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노동자 때려잡기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가 정치 위기에도 오히려 공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노동운동은 선거 결과에 움츠러들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실질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파업으로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5~7월 노동자 투쟁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무색케 할 수 있다면,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시리자의 타협 전략으로는 긴축을 끝낼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유럽연합(EU) 지배자들은 성가신 그리스에 점점 더 짜증을 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4월 24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재무장관이 기존 약속을 뒤집려고 하며 쌍방 사이의 큰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세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호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사 속 최신 기사다. 그것도 평소에는 그리스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을 보였던 신문의 기사가 이렇다. 그리스 좌파 장관들의 이력을 적대감 넘치는 논조로 다루는 기사도 있었고, 심지어 시리자가 테러리즘에 관대하다는 기사도 있었다.

가장 수준이 낮은 기사는 크리스 자일스의 ‘어린이이처럼 구는 그리스’를 다루는 방법’이다. 자일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긴축 찬성파의 수장 노릇을 하는 듯하다. 지난해 그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줘 사용한 통계 수치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어설픔게 헐뜯었던 적이 있다. 자일스는 4월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자들의 정서를 이렇게 요약했다. “지난 2월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대화를 피하는 그리스의 행동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참석자들은 그리스의 태도가 유치하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 당국자들은 페르는 어린이가 같아요.’” 이렇게 지독히 오만한 태도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긴축을 밀어붙이는 유럽연합과 열리드들을 왜 매스꺼워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의 논리적 귀결은 만민 주적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4월 초에 보도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유로존 재무장관들을 포함해 많은 유럽연합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난치시 밀었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시리자에서 극좌파들을 추아 내야만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논리적 귀결은 만민 주적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4월 초에 보도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유로존 재무장관들을 포함해 많은 유럽연합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난치시 밀었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시리자에서 극좌파들을 추아 내야만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 생가는 치프라스 씨가 새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로 이어진다. 그 대상은 그리스의 전통적 중도좌파 정당이자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사회당(PASOK)과 신생 중도좌파 정당으로 1월 총선에서 음 출마한 포타미(그리스어로 ‘강’이라는 뜻)다.”

황당하리만큼 명칭한 소리다. 시리자의 총선 득표율은 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치솟았는데, 치프라스에게 이런 성과를 모두 내버리고 유럽연합·독일 유럽중앙은행의 명령을 따라 낙오자들과 동맹을 맺으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은 1월 총선에서 사실상 날아가 버렸다.

양해각서

시리자 정부가 추구하는 전술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 2월 20일 그리스 재무장관 아니스 바루파키스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시리자 정부는 전임 정부가 맺은 [긴축] 양해각서 내용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이 합의에서] 그리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리자 정부는 그 대가로 그리스로 돈이 계속 유입되기를,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돈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 합의 때문에 긴축을 지속해야 하고, 시리자가 야당 시절에 공약한 진정된 개혁을 내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루파키스가 긴축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인지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그런 장광설이 귀에 거슬리겠지만 말이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스 정부는 IMF와 유럽중앙은행 등 불한당들에 거 값을 돈을 반박 구어모으고 있다. 그것도 가뜰이나 예산이 모자란 공공부문에서 말이다.

시리자가 집권 전에는 중단시키겠다고 했던 페레우스 항구 민영화는 지금 진척되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리스 국방장관 파노스 카메노스가 5백만 달러짜리 P-3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 개량 사업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이는 2006년 이래 그리스가 맺은 최대 규모의 군수 계약이다. 이로써 그리스 해군은 [지중해를 건너는] ‘불법 이민자’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시리자가 ‘기관들’(최근 들어 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 생가는 치프라스 씨가 새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로 이어진다. 그 대상은 그리스의 전통적 중도좌파 정당이자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사회당(PASOK)과 신생 중도좌파 정당으로 1월 총선에서 음 출마한 포타미(그리스어로 ‘강’이라는 뜻)다.”

황당하리만큼 명칭한 소리다. 시리자의 총선 득표율은 3퍼센트에서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5호 / 번역 차승일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행보는 유럽 노동운동에 양면적 영향을 끼칩니다”

시리자가 집권한 지 1백 일이 돼 간다. 그동안 시리자 정부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에 관해 **김종환** 기자가 4월 26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인 **파노스 가르가나소**와 대화를 나눴다.

시리자가 집권한 약 1백 일 동안 그리스 정부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5월 11일에도 IMF에 빚을 갚아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리자 정부는 기한에 맞춰 빚을 갚아 왔다. 이를 통해 시리자 정부는 정부 재정을 흑자로 맞출 수 있음을 유럽 지배자들에게 입증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지배자들과의 타협에 도달하고 8월을 넘기면 당분간 그리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그리 많지 않다. 시리자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시리자는 8월까지만 버티면 개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펼 수 있다며 그리스 대중과 좌파를 달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 정부 파산 ‘예측’ 보도들은 유럽 지배자들과 시리자 정부의 협상 과정이 매우 힘들고 지난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유럽 지배자들과의 합의 결과 시리자가 큰 후퇴를 하더라도 분노가 터져나오기보다는 안도감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시리자의 전술에 대해 파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시리자 대표이자 그리스 총리인 치프라스의 전술은 두 축으로 돼 있습니다. 한 축은 그리스 정부 재정을 흑자로 만들 수 있음을 유럽 지배자들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축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안도하는 여론이 지배적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시리자는 선거 때의 공약을 어겨야 할 것이다. 또, 시리자 정부와 유럽 지배자들이 대립하는 듯한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긴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한편, 신민당 등 그리스 우파는 “시리자 정부가 나라를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며 “디폴트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 우파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리자 정부가 곧 무너지거나 조기 총선이 곧 실시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파노스는 이렇게 전망한다. “그리스 파산 예측은 빚을 갚지 않는다는 내부장관이 이 캠페인을 하고, 시리자 정부와 유럽 지배자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합의에 도달할 듯합니다.”

이런 전망은 혁명적 좌파에게 장기적 안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리자 정부가 압력을 받아 곧 사라질 ‘막간극’ 정부라고 보는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리자 정부는 살아남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합의에 도달할 듯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을 환영한다” 유럽연합의 이주민 통제 때문에 지중해에서 난민들이 수몰 당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 4월 24일, 아테네.

여전한 그리스 운동의 전투성

다행히 중요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스 좌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투적 정서가 크다. 이는 시리자 정부에 대한 좌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국 ERT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비록 만족스럽기만 한 내용은 아니지만). ERT는 전임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폐쇄한 방송국이다. 한 편이 아쉬운 정부가 ERT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압력 때문이다.

3월 21일과 4월 20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일어난 시위도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서 돈을 걷으려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 당원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과 반나치 운동회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ERFA)뿐 아니라, 공산당도 큰 대

열을 이루어 참가했다.

아쉽게도 시리자는 이 집회에 공식적 정서가 크다. 이는 시리자 정부에 대한 좌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국 ERT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비록 만족스럽기만 한 내용은 아니지만). ERT는 전임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폐쇄한 방송국이다. 한 편이 아쉬운 정부가 ERT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압력 때문이다.

파노스는 5월 1일 국제 노동절 파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파업은 긴축이 계속되는 것에 노동자들이 항의한다. 것을 보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서 돈을 걷으려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5월 중에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할 예정인데, 교사 등 공무원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시리자 정부에 가해지는 우파적 압력과 시리자 내 좌파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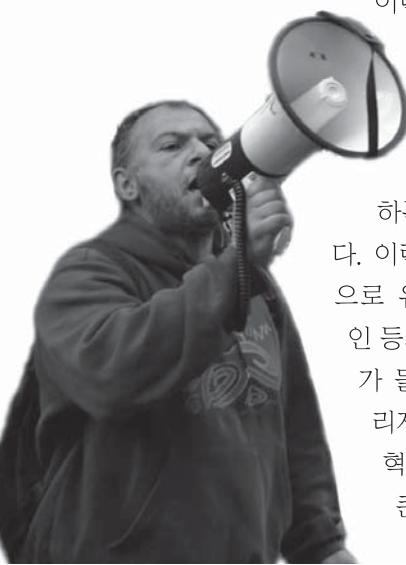
시리자 정부는 우파들의 압력에 받는다. 이를 보여 주는 사례가 재소자 처우 개선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리스의 우파들은 시리자가 제출한 이 법안이 수감된 ‘테러리들’을 지원하는 법안이고, 따라서 시리자가 ‘테러리스트’들과 연계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을 지원하는 내부장관이 이 캠페인에 사실상 동조했다.

올마 전 아테네대학교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을 때도 우파들은 경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라는 운동을 벌였다. 시리자는 며칠 동안은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 난입해 시위대를 끌어낸 것이다.

시리자의 연립 파트너로,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의 대표이자 국방장관인 파노스 카메노스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정부가 IMF에 값을 돈을 마련한다고 난리통을 겪는 와중에 그는 해상

초계기 개량 사업을 위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5백만 달러어치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수많은 요인들이 치프라스와 시리자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자 좌파의 행보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리자 내 좌파 경찰을 지원하는 내부장관이 이 캠페인에 사실상 동조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저 좋은 것만 아니다. 파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시리자 지도부의 전술에 함께함으로써 레프트 플랫폼은 치프라스와 그가 이끄는 협상에 얽매게 됩니다.”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룹(뤼디그룹) 영리병원을 들여오겠다고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또 중국 자본의 영리병원이다. 사업계획서도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판박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아니 중국 자본이 들어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47병상짜리 호텔 병원을 세우겠다는데 한국이 뭐이득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제주도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난리법석일까?

의료 관광? 영리병원의 진짜 이유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영리병원을 만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 정부가 발표한 ‘6차 서비스산업발전방안’에는 보건 의료부를 비즈니스화해 발전시켜야 할 것 분야로 꼽았다. 그 밖에에서도 첫째가 영리 자회사였고 둘째가 영리병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것이 바로 비영리병원의 영리 자회사라는 황당한 시행령이다. 반대 서명 2백만 명,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다. 또 이런 이유로 지난해 싼얼병원이 추진됐지만 싼얼그룹이 망하는 바람에 이 불통의 막무가내 정부도 더는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녹지병원을 추진한다? 도대체 왜 추진하는 걸까?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정말 그렇다면 현재 한국

성형외과 병원들에도 중국인 환자들이 이미 독일 좌파 안에서 시리자 지도부의 협상 중시 전술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졌다(본지 온라인 기사 참조). 스페인 포데모스 안에서 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적 좌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파노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혁명적 좌파는 우파의 위협으로부터 시리자 정부를 지키면서도, 이런 논쟁에 비관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중의 좌경화와 흐름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면 서 스페인 등지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시리자 정부뿐 아니라 혁명적 좌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애초 땅 투기 부동산 기업이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무슨 상관. 애초에 외국인 영리병원은 미국의 하버드나 존스홉킨스나 하는 최고의 병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시설 아니었던가? 그게 무슨 상관.

뭐가 어쨌든 ‘영리병원’이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녹지 국제병원의 진짜 목적이다.



모든 도둑집은 흔적을 남긴다

뭐든 영리병원이면 다 된다는 식이다 보니 그 추진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중국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이라서 제주시에 랜드마크(지역 대표) 빌딩을 짓고, 카지노를 만들고, 제주 웰스케어타운을 매입해 엉뚱한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는 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한 노동인데 병원 운영은 못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더니, 중국의 녹지그룹이 자본은 대고 그 병원 운영은 중국의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줄여서 연합리거)라는 기업에 맡기겠다는 한다.

BCC는 중국에 있는 병원경영지원 회사이다. 이 그룹을 찾다 보니 상하이 서울리거 병원(이하 서울리거)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최대 성형외과 병원인 BK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을 맡았단(올해 3월에 그만두었다) 홍성범 씨가 서울리거 원장이다. 이 서울리거가 연합리거 중 단연 제일 큰 병원이다.

그런데 범죄 흔적이 너무 많다. 정부 연구소인 산업진흥원의 출장 보고서이다. (아래 그림 - 보건산업진흥원 녹지그룹 보고서).

북지부 과장, 제주도청 관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녹지그룹 한국법인 사장 등이 녹지그룹에 방문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세인트 바움을 모델로 중국 하이난, 우한, 제주도 등에 세인트 바움 수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세인트 바움은 또 뭘까? 바로 서울 BK성형외과 대표원장(이었던) 홍성범 원장이 개원한 상하이의 바로 그 서울리거 병원이다. 녹지그룹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전달 세인트 바움 병원을 방문해 테이프 커팅 식에 대거 참석한다. 잠깐 헛갈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히 말하면 세인트 바움 병원은 국내 성형외과와 외국에 차린 한국 자본의 중국 성형외과 병원이다. 그리고 녹지그룹은 이 병원을 중국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수출한다고 한다.

아니 제주도라니. 서울의 병원을 제주도에 수출? 이걸 수출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수입이라고 해야 하나. 영리병원을 막으려는 싸움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 한국



모든 도둑집은 흔적을 남긴다

뭐든 영리병원이면 다 된다는 식이다 보니 그 추진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중국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이라서 제주시에 랜드마크(지역 대표) 빌딩을 짓고, 카지노를 만들고, 제주 웰스케어타운을 매입해 엉뚱한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는 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한 노동인데 병원 운영은 못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더니, 중국의 녹지그룹이 자본은 대고 그 병원 운영은 중국의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줄여서 연합리거)라는 기업에 맡기겠다는 한다.

BCC는 중국에 있는 병원경영지원 회사이다. 이 그룹을 찾다 보니 상하이 서울리거 병원(이하 서울리거)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최대 성형외과 병원인 BK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을 맡았단(올해 3월에 그만두었다) 홍성범 씨가 서울리거 원장이다. 이 서울리거가 연합리거 중 단연 제일 큰 병원이다.

그런데 범죄 흔적이 너무 많다. 정부 연구소인 산업진흥원의 출장 보고서이다. (아래 그림 - 보건산업진흥원 녹지그룹 보고서).

북지부 과장, 제주도청 관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녹지그룹 한국법인 사장 등이 녹지그룹에 방문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세인트 바움을 모델로 중국 하이난, 우한, 제주도 등에 세인트 바움 수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세인트 바움은 또 뭘까? 바로 서울 BK성형외과 대표원장(이었던) 홍성범 원장이 개원한 상하이의 바로 그 서울리거 병원이다. 녹지그룹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전달 세인트 바움 병원을 방문해 테이프 커팅 식에 대거 참석한다. 잠깐 헛갈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히 말하면 세인트 바움 병원은 국내 성형외과와 외국에 차린 한국 자본의 중국 성형외과 병원이다. 그리고 녹지그룹은 이 병원을 중국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수출한다고 한다.

모든 도둑집은 흔적을 남긴다

뭐든 영리병원이면 다 된다는 식이다 보니 그 추진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중국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이라서 제주시에 랜드마크(지역 대표) 빌딩을 짓고, 카지노를 만들고, 제주 웰스케어타운을 매입해 엉뚱한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는 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한 노동인데 병원 운영은 못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더니, 중국의 녹지그룹이 자본은 대고 그 병원 운영은 중국의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줄여서 연합리거)라는 기업에 맡기겠다는 한다.

게 받는 돈이 비싸고, 노동자는 적게 쓰며,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 사망률도 높다. 간단히 말해 영리병원 허용은 노동자와 국민에게는 재앙이지만 여기에 투자할 자본가들과 병원장들에게는 대박이다. 바로 박근혜 정부가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이유다.

의료 관광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물론 의료 관광이 잘 때도 문제다. 태국은 의료 관광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의료 관광객이 1년에 2백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 때문에 외국인 병원으로 의사가 너무 몰려 농촌에서는 의사 보기가 어렵다. 관광 병원을 뒤따라 보통 병원까지 의료비가 덩달아 올라 맹장염 수술, 담낭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비까지 한 해에 몇십 퍼센트씩 오르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의료 관광을 방한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노동자 서민에게는 재앙이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무늬만 외국 병원인 것처럼 제주도와 전국 경제자본 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자본 또는 국내의 합작자본의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 영리병원은 자기 맘대로 의료비를 정하고 건강보험증도 받아 주지 않는 병원이다. 형이나 피부 수술을 받는데 국내의 유명 영리병원은 안 되냐고 병원협회가 항의중이다. 영리병원이 하나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영리병원 하나를 세우려는 이유다.

매년 적자이던 건강보험이 4년째 흑자가 돼 흑자 재정만 13조 원이다. 서민과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 정신인 정부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 마디로 국내 병원들이 중국을 우회해 중국 자본을 끼고 제주도에 지부를 내려는 것이 제주도 영리병원이다.

건강보험 바깥에 있는 병원들이 생기고 병원에서 빠져지면 서민들은 정말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부자들과 자본가들만을 위한 이 정신 나간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을 막아야 한다.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강동훈

전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은 점차 둔화하는데도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상하이지수는 1년 전에 견줘 84.3퍼센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 닥스(25.2퍼센트), 일본 닛케이(29.5퍼센트), 미국 나스닥(16.7퍼센트) 등도 급등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만 포인트까지 올랐고, 중국 상하이지수는 200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천 선을 돌파했다.

한국 코스닥도 올해 들어 20퍼센트 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2조 달러(약 7경 7천조 원)를 돌파했다.

국채 가격도 뛰고 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추락한 사례가 늘었다.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국채 가운데 30퍼센트 이상이 마이너스 금리다. 2조 8천억 유로(약 3천3백 30조 원)어치쯤 된다.

독일 국채의 70퍼센트가 마이너스 금리고, 프랑스도 50퍼센트나 된다. 심지어 재정 위기를 겪은 스페인도 국채의 17퍼센트가 마이너스 금리다.

그만큼 채권을 사려고 돈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자를 받기는커녕 웃돈을 주고 서러도 국채를 매입한다는 뜻이다.

이런 채권 가격 거품은 대규모 '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채권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최근 발표한 '세계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식·부동산 시장 활황



세는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주식·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양적완화(자산 매입)를 시행하며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시작으로 영국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이 돈 풀기에 합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6조 위안(약 2천7백60조 원)에 이르는 데다, 올해 만기가 되는 중국 지방채가 4조 위안(6백90조 원)이나 돼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을 막으려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돈을 풀고 있다.

반면, 이렇게 풀린 돈들이 생산적 투자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PMI

미국·중국·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일본 등 세계 4대 경제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일제히 하락했다. PMI는 제조업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 지수 중 하나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미국은 54.2로 3월(55.7)보다 1.5포인트 하락

해 석 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유로존은 51.9로 0.3포인트 내렸다. 유로존은 특히 독일(52.8→51.9)과 프랑스(48.8→48.4)의 경기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국과 일본은 50에 못 미쳐 경기 위축의 신호를 나타냈다. 중국은 49.6으로 지난해 4월의 48.1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본도 49.7로 3월(50.3)보다 떨어졌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6퍼센트, 5퍼센트 성장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홀로 이끄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은 2.2퍼센트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0.2퍼센트로 급락했다.

미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엔진 구실을 해 온 중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2010년 10.4퍼센트를 기록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4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7퍼센트대 성장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7퍼센트였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4퍼센트 대이고, 물가지수 조작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급락은 중국 정부가 급하게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을

네팔 가난한 사람들이 대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다

유리 프라스드 영국의 사회주의자

수많은 네팔인들이 4월 25일 발생한 지진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집을 잃고 지금 절박한 처지로 내몰렸다.

유엔은 지진으로 8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한다. 4월 28일 기준으로 적어도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의료 체계는 마비됐다. 병원에 의약품과 병상이 부족하다. 깨끗한 물과 기초 위생 물품이 급속히 바닥나고 있어서 지진 피해에 이어 유행병이 창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가족들이 무수히 많다. 천막이 있거나, 플라스틱 널빤지로 나무 사이에 가림막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논평가들은 재빨리 이번 지진을 '자연재해'로 분류했다. 이 규정의 함의는 이렇다.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판 이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주장은 홍수, 허리케인, 쓰나미 등이 닥칠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체제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연재해?

지질학자들은 적어도 2013년부터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네팔에는 활성 단층[지질 구조상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9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건축물 보강 공사 같은 가장 기초적인 대비책마저도 대체로 이뤄지지 않았다.



벽돌로 지은 낮은 건물이 대거 무너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컸다.

게다가 이번 재난의 피해가 빈민에게 집중된 것은 전혀 '자연' 때문이 아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피해 상황을 전하는

보도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낮은 벽돌이 오밀조밀하게 모인 빈민가의 주민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에 사는 주민보다 목숨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다.

무인기로 카트만두를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집들이 무너진 붉은색 잔해 바로 옆에 현대식 흰 주택이 끄떡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릴라

수많은 네팔 청년들은 가난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다. 지난해 네팔을 떠난 사람은 하루 평균 1천 5백 명에 달한다.

네팔은 국토 대부분이 농촌이다. 외진 곳에 있는 많은 마을들은 도로도 연결돼 있지 않고 구호품을 나르는 헬리콥터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전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약 10년 전 농촌 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마오쩌둥주의 성향의 게릴라에 가

봐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3월 1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4월 19일에는 급작스럽게 지급준비율*을 1퍼센트포인트(19.5퍼센트 → 18.5퍼센트)나 인하였다. 주식시장 거품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 달이 멀다하고 돈을 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경제도 성장이 정체된 지 오래다. 한국은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퍼센트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내수 성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마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역시 부진한 경제 성장 등으로 최근에 또다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유로존도 양적완화로 일부 유로존 기업들이 숨통이 트였지만, 민간소비나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

최근의 실물경제 둔화가 금융시장 거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물경제 둔화에 대응해 돈을 더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은 더욱 치솟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고 중국 정부는 7퍼센트 성장을 위해 돈을 더 풀 것이라는 예측들이 금융 거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자국 경제를 살리려는 각국의 경쟁적 돈 풀기는 전 세계에서 거품을 키우며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불안정성은 조만간, 가뜩이나 침체된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줄어들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난다.

답해 가넨드라 왕조와 그 군대에 맞서 투쟁했었다.

네팔 지배계급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경멸한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구호하는 데 적극 나서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006년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정의 몰락을 기뻐했다. 2년 후 공산당이 이끄는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많은 사람들은 빈곤이 줄고 네팔이 근대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한때 게릴라 전사였던 공산당원들은 국가기구에 들어가자 쫓겨난 옛 부패 정치인들과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고 희망은 빠르게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처럼 네팔 좌파 본연의 과제, 즉 아시아 전역 민민들의 혁명이 더 절실했던 적도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51호 / 번역 김중환



미·일 역대 통치자들이 그랬듯이, 오바마와 아베는 제국주의 동맹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했다.

아베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준다

김영익

4월 26일 일본 총리 아베가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방미를 우려했다. 비단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이번 방미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 맞선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의 점증하는 제국주의 간 갈등이 낳은 결과이자, 이 갈등을 더 악화시킬 요인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서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바랐던 미국은 아베의 강경한 대외 정책을 환영했다.

미국은 아베의 방문을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오바마는 상·하원 합동 연설 기회를 주는 등 아베를 환대했던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명백히 일본의 '과거사' 문제보다 미·일 동맹의 '미래'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아베는 4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커

녕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변할 수 있었다.

아베의 방미에 맞춰 4월 27일 뉴욕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미·일 군사 협력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과 연합 작전을 벌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중국)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면 일본은 기뢰 제거, 탄약 보급, 선박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다.

미·일 군사 일체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 미군이 자위대를 지원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리고 안보와 방위 협력을 위한 양국의 조정을 위해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미·일 군사 일체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3국 간 또는 다자간 안보와 방위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또는 미·일·호주 삼각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발표한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 성명은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F-35B, 이지스함 2척 등 미국의 첨단 무기를 일본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배치돼 있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도 신형 로널드 레이건 호로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일본에 집중 투입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4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아베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힘 또는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해 주권과 영토 통합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지지한다고 밝혀,

미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확실히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가한 TPP를 체결해, 지적재산권 보호, 민영화·규제 완화 등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자유무역 질서를 이 지역에 구축하고자 한다.

TPP에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TPP를 통해 미국은 대(對)중국 견제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4월 초 미국 국방장관 애쉬턴 카터는 이렇게 말했다. "TPP는 내게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 아베도 미 의회 연설에서 TPP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일 양국의 안보에 관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될 것이고, 이 때문에 주변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맞대응도 이어질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안정 증대가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

박근혜의 협력에 항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 일조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도 협력하고 있다. 4월 초에는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 앞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편드는' 미국을 두둔하는 일도 있었다(〈한겨레〉, 4월 10일).

4월 중순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고, 연이어 한·미·일 3자 국방회의(DTT)도 있었다. 그만큼 한·미·일 삼각 동맹이 진전된 것이다.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취하고 있

는 행동"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참했다.

게다가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유사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군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미 동맹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얻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안전 보장을 확보하려는 전략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조차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지배자들이 오랫동안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본 축적을 해 온 것도 한국 지배자들이 과거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쓰레기 시행령(안)은 고쳐 쓸 수 없다

김지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정부 시행령(안)을 문구만 슬쩍 손봐 통과시키려 한다. 박근혜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참사 1주기에 맞춘 해외 도파에서 돌아오자마자 반격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야말로 진실 규명의 걸림돌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셈이다.

박근혜는 3월 27일 입법예고 기한이다 지나고도 시행령(안) 통과를 3번이나 연기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정세의 초점이 되면서 노동자 투쟁, 성완종 게이트와 맞물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완종 게이트의 초점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특별 사면에 맞추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는 시행령 통과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3석을 가져간 것도 자신감에 일정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점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다를 바 없다. 예컨대,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요 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도록 한 게 원안의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 이름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다.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타 부처 공무원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정부가 파견한 인물이 특조위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핵심 문제점은 그대로다.

더군다나 여당 추천 인사 조대환이 맡고 있는 사무처 산하에 문제의 행정조정실(기획조정실)을 둔 것은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책임을 밝혀내야 할 대상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석태 위원장)이다. 애초에 특별법 아랍시 여당 추천 인사가 사무처를 맡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옳았다.

유가족들과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설계부터 잘못된 정부 시행령은 조금 손봐서 쓸 수 없다.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한다.



쓰레기는 폐기해야 한다 4월 30일 시행령 수정안 반대 유가족 기자회견.

시행령 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체계적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6백만 명이 넘게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고(새정치연합이 일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해 온 인물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불렀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새누리당 의원 김재원)으로 몰더니, 여당 추천 인사와 파견 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내부 자료까지 유출했다. 반대로, 3월 중순 특조위원들이 해양수산부·검찰·법원·감사원에 공식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협조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반쪽짜리 특조위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일은 시행령(안)에만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 거나 광화문에 있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특조위를 무력화해 놓고 ‘진실 규명 노력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다. 이미 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유가족들이 지적한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 기구가 아니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위원회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도 정부의 방해에 맞서 싸우면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은 명시된 조사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무력화하려 한다.

독립성

따라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실 규명을 제약하는 정부 시행령(안)은 수정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다. 지금 온갖 독기를 내뿜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협상이 될 리도 만무하

다.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 시행령(안)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일사천리로 정부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특조위를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과 특조위 자체가 무력화됐으므로 탈퇴하고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싸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을 지속하려면 후자의 입장이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로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특조위 활용론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결국에 사기저하를 부를 수 있다. 완강히 버티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독립적 조사기

구가 필요하다는 진실 규명 운동의 원래 요구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참사는 정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축구팬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며 축구팬 96명이 압사하자, 경찰 당국은 축구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2012년 힐스버러 독립 조사위원회가 새로운 증거들을 밝히며 ‘경찰들이 적절히 대응했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살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수당 소속 현 총리 캐머런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2014년에 청문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지금도 경찰의 거짓말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융합돼야 한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등은 5월 1~2일 범국민행동을 호소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전국에서 모이는 노동자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필요함을 힘으로 확인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 비용 절감 논리, 이를 비교해 온 정부의 온갖 규제 완화와 부패가 맞물려 빚어진 비극이다. 지배자들이 역겨운 언론 플레이로 대중과 유가족들을 이간질

하고 물리력을 이용해 운동을 탄압하며 진실을 은폐해 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돈보다 사람들’이라는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와 맞닿아 있다.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만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에 이어 메이데이 주요 요구로 “세월호 진실 규명”과 “대통령령 폐기”를 내놓았다. 노동절 대회도 세월호 유가족

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를 노동운동의 상시적 강령의 하나로 표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은 이윤을 타격할 고유의 힘을 갖고 있다. 노동계급이 고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일 것이다. 노동운동 투사들과 좌파 정치 조직들은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를 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윤보다 인간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노동운동의 요구는 맞닿아 있다.